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3면	'특자도 브라더스' 오늘 춘천서 밀착 스킨십	1
江原日報	03면	“특교세 425억 확보 강원 정치력의 승리”	1
江原日報	02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활발한 교류 나서	1
강원도민일보	20면	한림성심대 혁신지원단 의료봉사	2
江原日報	03면	與 최고위원 배출 JC … 자치도 곳곳서 맹활약	2
江原日報	03면	국민의힘 조강특위 원주을 당협 심사	3
강원도민일보	02면	"자치분권 중심 도약, 실생활 밀접 강특법 3차 개정 필요"	4
강원도민일보	13면	석화초·홍천중 2028년 이전 개교 목표 속도	5
江原日報	02면	3대 전승 춘천대첩 기념관 건립 사업 첫발	6
江原日報		"화천 먹거리 통합센터·DMZ 생태벨트·파크골프로 미래 발...	7
江原日報	07면	강원자치도시대 건설업 부흥 전략 발굴	9
KBS 춘천		[여기는 강릉]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항만 활성화...	10
KBS 춘천		[여기는 원주] 방치 옛 강원도 종축장 부지 개발 촉구[1/2]	12
江原日報	01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속도 … 핵심은 '교육·산업특례'	14
江原日報	04면	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4곳 '0세반' 없다	14
江原日報	01면	'피서객 끊길라' 바가지요금과 전쟁 선포	15
江原日報	02면	'피서객 끊길라' 바가지요금과 전쟁 선포	15
강원도민일보	05면	최대 100mm 더 온다… 횡성댐 하류 수위상승 우려 대피령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남북어부 피해 국가보상 마땅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환상적 대형사업 아닌 손에 잡히도록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석회석 광산 지역 지원 촉구, 정부 귀 기울여야	19
江原日報	25면	[사설] ‘화천댐, 용인산단 용수 공급처’ 원팀으로 대응을	20

강원도민일보

2023 06 30 ()
03

‘특자도 브라더스’ 오늘 춘천서 밀착 스킨십

강원·제주 도의회, 족구경기·만찬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은 강원과 제주 각 특별자치도의회가 30일 춘천에서 체육행사를 갖고 교류를 이어간다.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오후 춘천 송암동 족구장에서 족구 경기를 가지며 친목을 다진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등 양 의회의원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권혁열

김경학

이후 닭갈비 만찬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했다. 제주의원

들은 29일 원주공항을 통해 도에 도착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달 1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에 머문다. 원주의료기기에크노밸리, 홍천외

국인계절근로자 정책 현장 등을 찾을 예정이다. 도의원들은 지난해 10월, 특별자치도의회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8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선 출범 후 첫 교류 행사다. 협약당시 양 기관은 공동 협력사업 발굴, 합동 세미나 교차 개최 등을 약속했었다.

양 의회는 앞서 지난해 7월, 본지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현지에서 개최한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을 통해 첫 인연을 맺고, 교류해오고 있다.

이철화

江原日報

2023 06 30 ()
03

“특교세 425억 확보 강원 정치력의 승리”

국민의힘 자치도당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29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5억원 확보, 강원 정치력의 승리’라는 논평을 내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당은 “국민의힘 도내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며 “강원 정치력의 결속이 한몫을 했고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행정과 의회가 단합해 위민의 정신을 발휘한 결과물”이라며 “도민을 위한 기록적인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혼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06 30 ()
02

강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활발한 교류 나서

오늘 친선 체육활동·만찬 개최
제주자치도의원 내일까지 道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친선 체육행사를 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한 활발한 교류에 나선다.

양 의회는 30일 오후 5시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족구장에서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장,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체육활동을 하고 이어 만찬을 갖는다.

지난해 10월 ‘상생발전 협약’을 한 두 의회의 교류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강

화할 방침이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올 1월 제주를 찾아 강원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분권·자치 특례를 모색한 바 있다.

30여명의 제주도의원은 강원 지역 의정 우수사례 견학 목적으로 29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에 머무른다. 전문가를 초청해 청렴 및 부패 방지 교육, 챗GPT를 활용한 의정활동에 대한 강연을 듣고, 30일에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현장인 원주의료기기에크노밸리, 홍천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7월1일에는 춘천 대표 관광지 중 남이섬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6 30 ()
20

한림성심대 혁신지원단 의료봉사 한림성심대학교 혁신지원단(단장 조영식)은 29일 소양강댐 효나눔복지센터에서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허인구 G1방송 사장, 양숙희 의원과 교수,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벌였다. 서영

2023 06 30 ()
03

江原日報

興 최고위원 배출 JC ... 자치도 곳곳서 맹활약

JC(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을 지낸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당선된 것을 계기로 J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 20~45세 청년들이 모여 지도역량,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JC 출신들이 강원자치도 곳곳에서도 활동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의회에서는 조성운(삼척) 의원이 강원지구JC회장 출신이고 문관현(태백) 의원이 태백JC회장, 이한영(태백) 의원이 태백JC감사, 이기

찬(양구) 부의장이 양구JC감사를 지냈다. 최승준 정선군수도 정선JC회장을 역임했다. 또 평창 출신 염동열 전 국회의원, 고성 출신 전재욱 경동대 설립자 등은 JC중앙회장 출신이다. 故 최돈웅 전 국회의원은 강릉JC 초대회장을 지냈고 황영철 전 국회의원은 홍천JC회원으로 활동했다.

조성운 의원은 “JC는 스피치를 비롯해 교육을 받고 역량을 개발하는 단체인 만큼 출신들이 정치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06 30 ()
03

국민의힘 조강특위 원주를 당협 심사

속보=국민의힘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위해 지역 당협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전날 마감한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결과(본보 지난 28일자 2면 보도)를 보고 받았다. 앞서 조강특위는 원주를 당협을 비롯해 전국 36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박진호 조강특위 위원장은 “총 접수자는 기접수자 포함 192명이다. 신규 접수자가 8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접수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부터 면접이 시작된다.

원주를 당협의 경우 지난해 신청했던 기접수자 권이중(51) 변호사, 박동수(65) 변호사, 안재윤(58)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윤용호(67)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회장, 장승호(53)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66) 전 원주시의원 등 6명에 더해 김기홍(45) 도의회 부의장, 최재민(39) 도의원까지 신청하며 경쟁자는 8명으로 늘었다. 서울=이하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6 30 ()
02

“자치분권 중심 도약, 실생활 밀접 강특법 3차 개정 필요”

본지·강원연구원 주최 포럼
상속세 감면 등 세부안 모색
시도 협력·재정 자립 등 논의
지방자치 발전 선도 역할 다짐

특별자치시·도의 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구축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지를 비롯해 농촌, 의료, 해양 등 각 항목을 중심으로 3차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내년 총선을 지렛대로 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후원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중심지 역할 모색 포럼'이 29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오늘 포럼의 주제인 '자치분권 중심지 역할'이다"라며 "내년 전북에 이어 앞으로 특별자치시·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중심지 역할 모색 포럼이 29일 강원연구원에서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과 토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다르게 나가야 한다. 방대한 양의 규제 완화는 타 시·도와 공조·연대에 정책적 다양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개정은 환경·산업·군사·농업 등 4대 규제 완화가 중심이었는데, 3차 개정부터는 좀 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 농촌, 해양, 의료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부분들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특위 위원장은 "강원특별자

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최초의 특별자치도 사례로, 다층제 행정체계를 잘 정착시켜 가는 것이 자치분권 중심지 역할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며 "18개 시·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절대농지 해제다. 토지이용 계획 등 시·군 특성을 적용해 합리적 조정과 시·군 안배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용식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한 '2023 강원자치분권 글로벌포럼'을 통해 강원·제주·세종·전북 국장들이 만나게 됐다. 4개 지자체는 내달 3일 국회에서 상

생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과 세제, 자치조직 등 각 부문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호백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조사 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경제적 자유도 높아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특자도에 부담하는 재정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강원도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

의식 조사결과를 세부 항목별로 발표했다.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부문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교육 거버넌스·세입분권·자치경찰 등 3차 개정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였다.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라는 인식,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자"고 했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 (자기결정권)을 얻었기에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분권, 자유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큰 희망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상속세 감면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끄는 분권의 핵심 중심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지은·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6 30 ()

13

석화초·홍천중 2028년 이전 개교 목표 속도

학교 이전 추진위 2차 협의회

갈마곡리·연봉리 이전안 논의

추진위원 해당 부지 현지 실사

홍천 석화초교·홍천중 이전사업의 방향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홍천지역 석화초·홍천중 이전 추진위원회 2차 협의회가 지난 28일 홍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들은 2025년 학교부지 매입, 2028년 3월 개교를 골자로 한 추진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계획 원안은 홍천읍 석화안길1길 12에 있는 석화초를 홍천읍 갈마곡리 539로, 홍천읍 석화로 109-10에 위치한 홍천중을 홍천읍 연봉리 333-1로 이전하는 것이다. 위원들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투자논리를 벗어나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곤 홍천중 교장은 “원안이 예산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석화초가 갈마택지지구로 이전하고, 현 석화초 부지로 홍천중을 이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옥 운영위원장(도의원)은 “이전은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고려해 최대한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화 남산초교 학부모회장은 “학부모들은 홍천중 이전부지로 예정된 연봉리에 학교가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홍천중이 현 석화초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홍천중과 홍천여중이 남녀공학으로 개편돼 홍천읍 연봉리와 갈마택지지구 에 각각 들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가깝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위원들은 회의 후 이전 부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실사를 했다.

한편 석화초교의 경우 구도심 공동화, 통학불편 등으로 재학생이 읍내 타 학교로 불법 전학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재학생 320명 중 224명이 거주하는 갈마택지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홍천중은 홍천고 바로 옆에 위치해 부지가 좁고, 체육관, 운동장 등의 이용이 어려워 학생들의 불편이 수년간 계속돼 왔다. 유승현

江原日報

2023 06 30 ()
02

◇‘춘천대첩평화문화기념관 건립 범시민대회’가 29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두원 인턴기자

3대 전승 춘천대첩 기념관 건립 사업 첫발

평화문화기념관 건립 범시민대회

6·25전쟁 3대 전승 중의 하나인 춘천대첩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 사업이 첫발을 뒀다.

춘천대첩평화문화기념관 건립 범시민대회가 29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춘천대첩평화문화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춘천시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박관희·정재웅·박찬홍 도의원, 김보건·김영배·김용갑·김운기·박노일·배숙경·정재예 춘천시의원, 진성균 춘천대

첩평화문화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장, 김일환 무공수훈자회 강원도지부장, 양영석 전물군경유족회 강원도지부장, 강대규 변호사, 장이래 영화감독, 박선우 전 육군대장, 김미영 전 강원도 부지사, 김선배 전 춘천교대 총장, 노관석 전 강원병무청장 등 대표·상임위원 및 기관·단체장과 참전유공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진성균 추진위원장은 “6·25전쟁 역사에 길이 남을 춘천대첩이지만 변변한 기념관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념관 건립을 위한 범시민대회를 열게 돼 가슴이 벅

차오른다”며 “희생 정신과 애국혼을 선양하며 향후 세대에 이어질 평화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기념관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차근차근히 사업을 살피는 등 춘천대첩의 구국정신을 잘 이어 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가 후대에 길이 남겨질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광석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가 ‘춘천대첩 평화문화 기념관의 세계사적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규호기자

2023 06 30 ()

江原日報

"화천 먹거리 통합센터.DMZ 생태벨트.파크골프로 미래 발전 토대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 찾아가는 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
 화천군,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목표.향후 대응방안 등 제시
 화천.하남권역=먹거리 통합센터, DMZ생태벨트, 파크골프
 사내.상서권역=사내제2농공단지조성, 명품 임산물 상품화
 간동권역=동서고속화철도역세권 개발, 주거.산업복합단지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 29일 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이화원 군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한 화천군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DMZ 생태벨트, 파크골프 등 미래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은 29일 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는 강원특별법 개정 특례와 활용 전략 등을 설명하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밝혔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 29일 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이화원 군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최수명 군기획감사실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화천 권역별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먼저 화천·하남권역에서는 군납 대응을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해 DMZ 생태벨트, 파크골프 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계획을 내놨다.

사내·상서권역에서는 사내 제2농공단지 조성, 명품 임산물의 상품화, 귀산촌, 체험, 휴식 등 숲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언급됐다.

간동권역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산업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화천군은 향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예 대비해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특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특례 발굴 의지도 밝혔다.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 29일 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이화원 군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군납 농업인들은 "군부대 농산물 수의계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특별자치국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법 개정예 군납 수의계약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문순 군수는 "군납 뿐 아니라 사격장 소음, 농업과 군사, 환경, 산림 등 각종 규제해소를 위해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와 연대해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화천군이 머무르고 싶은 고향 같은 고장,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회의가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광열(도 경제부지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장과 위원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두원 인턴기자

강원자치도시대 건설업 부흥 전략 발굴

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변화의 기로에 선 강원건설경제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 강원자치도와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강원자치도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도 교육청 등 도내 6개 유관기관,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를 비롯한 7개 건설단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개 분야 23개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산업 관련 제

도-유관기관-건설단체 머리 맞대 4개 분야 23개 과제 추진 발표 발전계획 수립 의무 등 특례 반영

도 개선 추진, 불법·부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하도급 계약 및 건설현장 관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의 수립 의무와 권한 등을 '강원특별법' 특례로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는 도의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건설업을 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SOC예산 투자 확대 편성, 대형공사 분리발

주, 시설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는 예정금액 3억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한 상호시장 개방 금지를 건의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도회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와 10억원 이상 공사건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요구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도지회는 도내 업체 중 명의만 강원도인 외지업체가 절반 수준임을 밝히며 토종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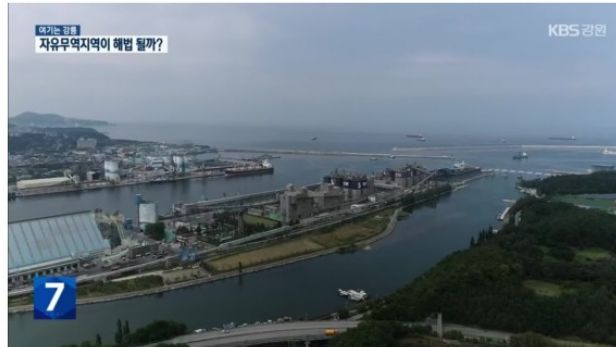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최근 건설공사 수주를 감소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haha@kwnews.co.kr

2023 06 29 ()

KBS 춘천

[여기는 강릉]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항만 활성화 해법될까?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해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관련 내용이 반영된 건데요.

항만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과제도 분명해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 동해안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 동해항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항만 물동량이 연간 3천만 톤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벌크 화물 위주로, 컨테이너 화물선은 물동량 부족에 운항 중단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동해항과 항만 일원 활성화를 위해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로 강원도 내 무역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관세 유보와 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가능해, 투자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지역에서만 98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8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종을/동해시 미래전략담당관 : "물류 유통이 좀 활발하게 이뤄지고요. 외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 같은 게 활발하게 이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 유치가 중요한데,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자유무역지역을 상대로 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재진/강원연구원 지역개발실 연구위원 :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과고는 좀 다른 측면의 특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동해시는 강원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6월에 맞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동해항을 자유무역항으로 만들어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강원도와 동해시의 구상이 기대한 만큼 현실화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강릉·동해·삼척 상공회의소 "전기요금 차등제 촉구"

강릉·동해·삼척 상공회의소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제 조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상공회의소들은 오늘(29일) 강릉에서 동해안지역 전력 다소비 기업 5곳과 협약을 맺고, 전기요금 차등제 조기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또, 지역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수도권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의 유치가 수월해져 국가 균형 발전 촉진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요금 다음 달 인상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이용 요금이 다음 달(7월)부터 5천 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인' 이용 요금은 기존 만 원에서 만 5천 원으로 오릅니다.

정선군은 인상분 5천 원을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줘, 요금 인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은 또 올해 말까지 연간 시즌권을 5만 원에, 내년 6월까지 반기 시즌권을 3만 원에 각각 한시적으로 판매합니다.

국립산악박물관 다음 달 새로 개관

속초시에 조성된 국립산악박물관이 다음 달(7월) 1일부터 새로 개관합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지난 4월부터 이달(6월)까지 석 달 동안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국내 명산과 관련한 다양한 소장품과 피켈 등 등산 장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은 또 오는 9월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설악산'과 관련한 기획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태백 청소년 안전캠프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태백시 한국안전체험관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1박 2일'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는 태백시와 강원소방본부가 함께 운영하는 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다음 달(7월) 18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모두 네 차례로, 1박 2일 프로그램은 두 차례 진행됩니다.

태백시는 청소년 안전캠프를 통해 안전 체험교육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한국안전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정상빈

[여기는 원주] 방치 옛 강원도 종축장 부지 개발 촉구



[앵커]

원주입니다.

원주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옛 종축장 부지가 개발 구상이 나온 뒤에도 수년째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앞서, 강원도가 개발을 약속한만큼 오페라하우스 같은 문화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혁신도시 인근의 강원특별자치도 옛 종축장 땅입니다.

면적은 6만 제곱미터, 축구장 8개 크기의 알짜배기 땅입니다.

강원도는 2019년, 이곳에 1,500억 원을 들여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가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사업 진척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강모/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 "협약만 했지 사실상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어떤 뚜렷한 답이 없었는데요, 시민의 입장으로는 사실상 문화 공간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강원도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된 이 땅에 남부권 주민을 위한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특히 이 일대가 빠르게 도시화 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늦어질수록 공사비도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강수/원주시장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통해 경제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장 사업이 현실화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개발을 위해선 땅의 소유권을 강원도로 넘겨야 하는데 현재 주인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이견으로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산되는 사업비만 2천억 원에 이르러, 재원 마련부터 정부 관련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원주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23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자재 가격 상승과 우박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 농기계는 승용이양기와 콤바인을 제외한 임대 농업기계 모든 기종입니다.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영월서 시범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7월)부터 영월에서 ‘강원형 건강증진 모델’ 개발 시책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영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걸음 수에 따라 지역 화폐로 보상해 주는 ‘걷기 도전’과 휴가지 원격 근무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운탄고도 도보여행 도전’, 그리고 걷기와 병행한 ‘내 몸 내 마음 살리는 마음 챙김 명상’ 등입니다.

강원형 건강증진 모델은 전국 하위권인 도민의 건강 수준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강원자치도의 올해 역점 시책입니다.

원주시, 다음 달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원주시가 다음 달(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대상에 인도를 추가해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또 1명이 하루 세 차례까지만 가능했던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다음 달(7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 달(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평창초에 ‘학교숲’ 조성...체험학습 공간

평창초등학교에 자연친화적인 학습, 녹지 공간인 ‘학교숲’이 들어섰습니다.

학교숲은 관목과 교목 등의 나무와 꽃, 숲 체험 조경시설 등으로 꾸려져 교과 과정과 연계한 자연 체험학습 공간으로 쓰입니다.

학교숲 조성에는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평창 학교숲은 2015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7곳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탁균

2023 06 30 ()

01

江原日報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속도 ... 핵심은 '교육·산업특례'

도, 오늘 지자체·도교육청·대학·강원연구원 案 취합

초안 토대 7월부터 실제 법안 제정 작업 ... 이르면 10월 공개
'80% 삭제' 교육 분야 만회 ... 첨단·국방산업 권한 확대 예고

7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3차 개정안이 만들어진다.

정부의 반대로 80% 이상 삭제된 교육특례를 반드시 반영시키고 첨단, 해양수산, 국방산업 등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게 강원자치도의 계획이다.

도는 30일 도내 18개 시·군과 도

청 실·국, 도교육청, 대학교, 강원연구원 등으로부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을 특례를 취합한다. 2차 개정이 군사·환경·산업·농업 4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3차 개정은 교육특례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산업특례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다시 정

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시·군과 대학 등에서 제출한 특례 초안을 토대로 7월부터 실제 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첫 번째 과제는 교육특례 반영 폭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안에 교육특구와 교육자치 등 24건의 교육특례를 제안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20건이 무더기 삭제됐다. 교육특구 지정, 국제학교 설립, 교육자치특례 등을 반영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자율학교 운영 특례만 포함됐다.

또 다른 과제는 실제 지역 개발, 기업 유치,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특례를 구체화해야 한다. 2차 개정을 통해 확보한 규제 완화 권한을 토대로 산업육성 특례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4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동해안 해양산업 육성, 석탄경석의 광물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접경지역의 강원형 첨단방위산업 육성 등 국방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3차 개정안은 9월까지 완성되며

이르면 10월 도민 공청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도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마치면 연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내년 총선 전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시·군과 도교육청은 물론 도내 대학과 강원연구원 등 연구기관까지 총망라해 3차 개정안에 담을 특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제화에 착수할 것"이라며 "10월에는 법안 초안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 06 30 ()

04

江原日報

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4곳 '0세반' 없다

전체 853곳 중 350곳 41% 해당
타 연령보다 인건비 2~5배 영향
운영 기피 현상에 보육공백 심화
육아 위한 학부모 경력단절 발생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집들이 0세반 운영을 기피,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부모들의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9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0세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853곳 가

운데 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은 총 350곳(41%)에 달한다. 어린이집들은 0세반을 운영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원인으로 운영비 부담을 꼽고 있다. 현행법상 3세반이 아동 15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데 반해 0세반은 아동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는 동일하지만 인건비는 타 연령에 비해 2~5배 필요로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맞벌이 가정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찾아 떠돌다 부모 한 명이 육아를 위해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양구의 이모(여·29)씨는 직장을

포기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 이씨는 "연락이 온 어린이집은 0세반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보육을 실시한다고 해 나이가 많은 형·누나들 틈에 보내기가 싫었고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아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더욱 심각하다. 백기범(춘천 늘해랑 어린이집 원장) 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회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 급여 외에 공과금과 식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다음 해 0세반이 개설되지 않으면 보육교사는 권고사직돼야 한다"며 "나날이 감소하는 출생아 수도 0세반 유지

의 어려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내 어린이집은 아동 수 감소로 인해 매달 4~5곳이 폐원하고 있다. 올해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53곳이 줄었다.

유종운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또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정 도 보육지원팀 주무관은 "현재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forest@

2023 06 30 ()

01

江原日報

‘피서객 끊길라’ 바가지요금과 전쟁 선포

내일 동해안 해수욕장 첫 개장
시·군, 가격 상한 등 예방 총력

속보=7월1일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본보 지난 22일자 1면 보도)하고 피서객을 맞이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가 바가지요금과의 총력전에 나섰다.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신과 관광명소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지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꽃게 바가지 논란은 상인들의 자정대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냉소를 받기도 했다. 지난 강릉단오제 역시 강릉시가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가격 실명제를 도입했음에도 막판 슬러시 요금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번 씌워진 이미지는 쉽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바가지 사전 차단을 위해 물가안

정대책을 내놓고 지도 점검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강릉시의 경우 해수욕장 내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파라솔(1만원), 튜브(5,000원) 등으로 정하고 카드 결제 의무화도 도입했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 이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명록·류호준기자

2면에 계속

2023 06 30 ()

02

江原日報

‘피서객 끊길라’ 바가지요금과 전쟁 선포 -1면에서 계속

삼척시의 경우 7~8월을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경제, 관광, 위생 등 7개 부서로 구성된 피서지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지역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등 주요 피서지 17개소에서 숙박업, 요식업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 과다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와 가격표시제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등 주요 피서지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8개소를 운영,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응할 방침이다. 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 나머지 동해안 시·군도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강릉시 등 지자체와 도환동해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은 7월1일 경포, 7일 주문진, 8일 속초, 14일 송지호 등 순차적으로 개장, 총 86곳이 운영된다. 박건식 경포변영회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바가지요금 등이 이슈로 떠오른 만큼 강릉에서는 비슷한 논란이 없도록 하지는 데 뜻을 모았다”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변영회 차원에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6 30 ()

05

최대 100mm 더 온다... 횡성댐 하류 수위상승 우려 대피령

영서·중북부 산지에 호우특보
도내 곳곳 침수피해·행사 취소
도·시군, 재난안전 문자 지속대응

강원특별자치도내 영서와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 시간당 20~4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했다. 각 지자체도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 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2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영서의 경우 최대 100mm, 산지는 30~80mm의 많은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영동은 20~60mm의 비가 오겠다. 특히 29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영서지역인 영월·평창평지·정선평지·횡성·원주·철원·화천·홍천평지·춘천·양구평지·인제평지뿐 아니라 도내 중·북부 산지 일대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춘천·철원·화천·홍천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9일 춘천시 신동면의 한 경사지에서 주민들이 비 피해에 대비해 천막을 씌우고 있다.

오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북산(춘천) 104mm·양구 92mm·평화(화천) 80mm·북춘천 74.1mm·춘천신북 73.9mm·방산(양구) 72mm·화천 71mm 등이다. 많은 비가 내리자 K-water 강원지역협력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는 29일 낮 12시부터 횡성댐의 수문을 개방하고 1초에 400t의 물을 방류했다. 이에 따라 횡성댐 하류 지역은 하

천 수위 상승으로 위험이 우려돼 야영 금지와 안전한 지역 대피령이 내려졌다. 추가로 2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많은 비가 예고되자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29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 인명피해 우려지역 255곳과 배수로 및 빗물받이 3만 8233곳, 침수도로 27곳 등을 사전 점검 및 개선에 나섰고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횡성 1곳, 정선 2곳의 강변 둔치주차장 일대 차주 102명에게 문자를 발송해 사전통제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호우에 행사도 취소됐다. 이날 춘천 우두교 수변공원 일대에서 지난 24일 개막한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 '물 좋은 도시 물만난 춘천 여름편'의 오후 프로그램이 취소됐다. 행사를

주최하는 춘천문화재단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방문을 예정했던 사전신청자 30여명에게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알렸다. 이어 문자로도 "폭우로 안전을 위해 행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침수되는 등 관련 피해는 이어졌다. 주택 침수 2건과 나무 제거 2건 등 4건의 소방활동이 발생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2분쯤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의 한 도로에서 나무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선 오후 2시 52분쯤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의 도로에도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아 출동한 소방당국이 제거했다. 같은날 낮 12시 33분쯤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의 한 주택이 빗물이 들어와 소방당국이 배수 조치를 진행, 앞선 낮 12시 32분쯤에는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의 한 건물 지하실에 물이 가득차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김정호·신재훈·강주영

강원도민일보

2023 06 30 ()

/ 19

납북어부 피해 국가보상 마땅

-간첩 조작·사찰·감시 등 고초... 특별법 관철돼야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가 귀환 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했던 납북 귀환 어부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최근 속초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법 제정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간첩 누명을 쓰거나 사찰의 대상이 되는 등 오랫동안 억울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가족들도 가난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은 온당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국내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가 머물다 귀환한 선원은 32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거나 수사·정보기관에 감시, 사찰을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과 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전체 납북귀환어부 중 1300여명에 불과합니다. 추진위는 다른 피해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1만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귀환 어부와 가족도 요시찰 대상으로 사찰과 감시, 연

행, 2차 간첩 조작, 연좌제 등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원하지도 않은 북한 생활로 가족과 생이별한 것도 억울한데, 돌아온 후에도 간첩이라는 오명을 쓰며 처벌은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사찰과 감시로 개인적인 자유를 잃었습니다. 납북 어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최근엔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고성 조업 중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보상을 받으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납북 어부들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구제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추진위원회 출범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납북 어부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행한 인권 침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과거 국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았다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위로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6 30 ()
/ 19

환상적 대형사업 아닌 손에 잡히도록

-민선8기 1주 이후 방향성 <하> | 작지만 확고한 변화축적을

민선 8기가 시작된 작년 7월은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전염병 이전의 사회경제적 복구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전반적인 경기 수치고 실물경제는 더 후퇴했고 생활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사회적 갈등까지 지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위기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고, 그 여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어렵게 하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야심 차게 제시한 각종 공약과 숙원사업 해결을 향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1주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가 특별자치시대로 전환된 요즘 상황은 도내외, 국내외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성장 늪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역사회 기반인 생산적 인구가 줄어 도와 시군을 가리지 않고 발전에 대한 압박감이 큼니다. 현상 유지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담아내는 지역사회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칫 무력감에 빠질 수 있기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장밋빛 대형 프로젝트와 추상적인

경제 효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실제적인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허울을 쓴 대규모 사업이나 중엔 토건사업만 남고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일수룩 지사와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 취향과 정치적 욕망에 따라 독단적으로 좌우될 여지가 큼니다. 신성장 동력사업을 기한 없이 기다리거나, 특정층에 이익이 돌아가는 토건사업으로 전략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전반기를 향하는 시간은 임기 중 실현하는 사업 중심으로 치열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역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열악한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실현은 세밀하고 소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변화든 한 방에 일거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작지만 확고한 변화를 가져오는 창의적 시도가 활발해야 합니다. 일례로 고통받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같이 민생에 우선 가치를 두고 중앙정부의 한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해 내는 성과를 손에 잡히게끔 구현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6 30 ()

/ 25

석회석 광산 지역 지원 촉구, 정부 귀 기울여야

강원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역을 포함할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석회석 광산으로 인해 환경·경제·주거여건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석회석 폐광지역을 폐광지 지원법에 포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 조항을 추가해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석회석 광산 지역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폐광지 복구 및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존에 있는 석회석 광산의 복구 예치금을 활용해 나무 식재와 초류 파종(시드스프레이)에 의한 단순 녹화 방식으로 폐광산을 자연 상태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은 미흡해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석회석 폐광산 주변 지역을 되살리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제 동해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석회석 폐광지를 통상적인 원상복구 방식이 아닌 친환경적·창조적 복구(무릉별유천지 1단계 개발)를 통해 전망대, 글라이더, 루지, 라벤더 공원 등을 조성, 특화관광시설을 개발했다. 2단계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상하수도·전기·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민 여가·편의시설을 확충, 일자리와 소득창출형 전략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사정으로 대체산업을 구상하고 육성하는 등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석회석 광산은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정선 등에 전국(104개소)의 52.8%(2022년)인 55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도내 석회석 산업은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하지만 정작 광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개발에 대한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석회석 채굴지는 철저하게 망가지고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석회석 채굴로 울창한 산림은 훼손돼 백두대간 자락인 자병산과 같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멘트 공장의 굴뚝에서 밤낮으로 뿜어져 나오는 분진은 주민들의 고통이었고 공장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로 공동체의 삶은 무참히 짓밟혔다. 정부와 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늦기 전에 폐광지가 복구되고 석회석 광산 개발로 지금까지 분진, 폐수, 소음이나 지반 침하,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6 30 ()
/ 25

‘화천댐, 용인산단 용수 공급처’ 원팀으로 대응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난제였던 대규모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팔당댐 외에 화천댐을 신규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20년간 300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공장 5개와 설계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150곳이 들어설 이 클러스터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다.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려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반도체 산업 고도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중국에 맞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총본산이자 보루 역할을 맡게 된다. 삼성의 투자는 제조업의 명맥을 차세대 미래에까지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따라서 정부와 삼성이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 사업은 반도체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고용과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 생활·공업용수로 쓰인 적이 없는 화천댐 물이 대거 용인으로 공급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도권 용수 공급처로 전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용수 공급댐이 아닌 발전용 댐인 화천댐은 그간 공업용수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수도기본계획을 정비해 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자치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인식하기 그지없다. 강원도의 자연환경은 국민 삶에 긍정적 요소를 제공하는 반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각종 규제는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청정 환경, 국가 안보 등 공익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낙후, 비효율적 국토 이용 등 손실이 동등해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규제로 이익을 누리는 국민과 피해를 보는 국민 사이의 공평

함도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화천댐의 막대한 물을 용수로 쓸 수 있게 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도 수도권의 각종 개발계획에 이용하려

국토부 등,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열어

강원자치도, 수도권 용수 공급처 전략은 곤란

지역 정치권·학계 등 연합 대책 마련해야

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강원도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 정치권, 학계, 관련 단체 등과 ‘원팀’을 구성, 정교한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한강 수계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이며 북한강 수계에서도 화천댐과 소양강댐의 용수 일부가 중부권의 사실상 마지막 수원(水源)이다.

그동안 활용이 불가능했던 화천댐을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강원자치도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핵심 사업이다. 한국의 대표 기업이 사활을 걸고 내놓은 대형 프로젝트에 강원자치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치밀한 전략이 중요하다.